

충남 복지 분야의 전망과 과제

성태규 | 충남발전연구원 지역정책연구부장

I. 서론

저출산·고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충남의 사회복지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세계적으로 경제침체를 초래하여 많은 사람이 경제적 소외계층으로 전락하였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여파가 적었고 또 빨리 위기를 극복하여 침체의 정도가 미약했지만, 경기침체의 영향을 극복하는 데에는 향후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 2009년에는 신종 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하여 보건복지에도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신종 전염병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었고 백신공급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되었다.

2010년 이후에도 충남의 사회복지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또한 절대빈곤이 점차 개선되고, 삶의 질에 대한 주민의 복지욕구가 증가하여 복지서비스의 종류도 다양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역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향후 충남의 사회복지분야의 전략과 핵심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국내외 복지여건의 변화를 정리하고, 3장에서는 보건복지부의 2010년 업무보고자료를 중심으로 2010년, 그리고 향후 중앙정부 사회복지정책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4장에서는 2·3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충남 사회복지정책의 전략을 정리하였고, 5장에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보육, 보건·의료서비스, 기타 부분으로 나누어 부문별 정책과제를 정리하였다.

Ⅱ. 국내·외 복지여건의 변화

1) 국외 복지여건의 변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선진국에서는 많은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계 각국은 많은 재정투자를 하였고, 저금리 금융정책을 통해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현재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완화되면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과다한 유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출구전략”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출구전략”은 필연적으로 재정의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복지재정을 축소할 것이므로, 사회복지부문에 미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하여 세계화는 계속 사회복지의 축소를 강요하고 있다.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부문에서의 유연성이 강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로 노동의 유연화가 진전되면서 고용이 불안정하게 되어 안정된 삶이 취약해지고 있다. 무한대의 경쟁으로 금융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각국은 자국의 화폐가치 안정을 위해 재정적자 해소에 많은 중요성을 두고 있다. 이에 많은 선진국에서는 과거 사회복지체계가 약화되고 있다. 특히 앤서니 기든스가 “제3의 길”을 외치고 난 이후 서구 사회복지국가들은 “적극적 복지”, 즉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복지를 외치고 있다. 무임승차 심리에 따라 일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복지는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렵게 되었다. 고실업과 ‘일자리 창출 없는 고성장’의 시대에서 서구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강화된 것은 오래 전의 일이다.

서구는 이제 미래수요중심적인 복지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복지재정이 열악해지고 있고, 의료비의 지출도 증가하고 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로운 빈곤층이 생겨났다. 이들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혜택이 없는 가구, 빈곤층의 차상위계층 중 일부 실직·폐업으로 생계위험을 받는 계층이다. 따라서 이들의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공급체계를 다양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 국내 복지여건의 변화

국내 복지여건도 변화하고 있다. 첫째, 저출산과 고령화이다. 시대적 흐름이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는 세계적 추세와 비교할 때 대단히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통계청의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2007년 1.26명으로, 이런 추세라면 2018년 4,934만명을 최고점으로 이후에는 총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노년부양비율은 2008년 14.3%에서, 2018년에는 19.7%, 2027년에는 32.6%, 2036년에는 48.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노년부양비율 전망(2008~2036)

연 도	2008	2018	2027	2036
노년부양비율	14.3	19.7	32.6	48.9

자료 : 통계청(2009)

고령화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의 고령화사회에서 14%의 고령사회로 전개되는 걸린 시간은 18년이였다. 이에 비해 미국은 73년, 독일은 40년, 일본은 24년 동안 진행되었다. 고령사회에서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인 초고령사회로 진행되는 기간도 미국의 21년, 독일의 37년, 일본의 12년에 비해 훨씬 빠른 8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로 인해 연금 및 보건의료 등 복지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있다.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 연금적자의 문제는 정치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이다. 고령화와 저출산은 노동공급과 자본축적을 저해하여 국가와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이는 다시 복지재정을 압박하는 악순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변화요인은 소득양극화와 사회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전국 1인가구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0.316에 달하고 있다. 2009년 OECD가 비교한 근로소득 불평등정도를 나타내는 2007년 P90/10¹⁾은 OECD평균은 3.30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4.85로 불평등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저임금근로자²⁾의 비중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7년 OECD 18개국의 평균이 16.8%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25.6%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저소득층의 확대, 소득양극화는 사회갈등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계층분리를 완화하고 계층간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가족부양의 책임과 가족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여성취업이 증가하여 아동부양은 가정에서 기관으로 이전되고 있고, 소가족화·핵가족화로 가족의 기능도 약화되고 있다. 여성취업으로 인한 돌봄기능의 약화는 전통적인 가족형태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적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사별과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의 형태도 한부모가구, 부부1세대 등 다양화되고 있다. 한부모가구의 비율은 2000년 871천가구(6.1%)에서 2005년에는 1,042천가구(6.7%)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가족의 재생산, 양육 및 교육기능, 부양기능 등 가족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향후 가족친화적 정책기반이 요구된다.

넷째, 사회적 약자의 위기대응능력이 약화되고 있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위기 대응능력이 약화되어, 이들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복지서비스의 필요성도 증대하고 있다.

다섯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국제결혼의 증가로 결혼이민자가족이 새로운 가족유형으로 등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다문화 다인종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세계화로 더불어 다문화경향은 향후 더욱 강화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가족지원정책이 요구된다. 결혼이민자가족의 통합과 다문화 가족의 자녀에 대한 사회적응은 지역복지의 한 측면이 된다.

〈표 2〉 외국인과의 혼인현황

구 분	2000	2005	2007	2008
총 혼인건수	332,090	314,304	343,559	327,715
외국인과의 혼인	11,605	42,356	37,560	36,204
총혼인건수 대비 구성비(%)	3.5	13.5	10.9	11.0

1) P90분위수는 근로소득이 낮은 수준부터 90%에 위치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수준을 나타낸다.

2) 저임금근로자는 임금이 전체 임금근로자 중위값 2/3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Ⅲ.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방향

1) 이명박정부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은 친서민 중심의 복지정책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첫째, 빈곤, 건강, 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기본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자립생활을 유도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 하는 등 기본생활보장을 확충하고 자립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산층을 확산하고, 고용과 연계된 사회서비스 투자를 확대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가족친화적 정책을 추진하고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향후 미래를 바라본 선제적 투자와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확충한다

셋째,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충하고,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통합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등 수요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넷째, 복지효율화 및 성과중심의 정책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한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제도를 선진화하고, 성과지표에 기초한 사업집행과 평가체계를 확립한다.

2) 중앙정부의 2010년 복지정책³⁾

2009년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신속하게 민생안정지원대책을 추진하여 서민생활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한 신종 인플루엔자 사태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2010년에 보건복지부는 향후 ‘신종 전염병’ 등 새로운 건강위기가 대두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경기회복 이후 여전히 어려운 서민생활을 지원하며,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인한 경제·사회적 충격을 선제

3) 보건복지부(2010), 업무보고 자료

적으로 최소화하는 문제를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대비해 보건복지부는 서민생활안정, 국격향상, 미래대비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별 핵심과제를 설정하였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신종 전염병에 대한 완벽한 국민보호망과 빈틈없는 의료안전망을 구축하며, 경제위기 회복과 함께 공백없는 서민보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효율적인 복지, 새로운 나눔문화운동 확산 등을 과제로 추진할 것이다.

국격향상을 위해서는 해외환자 유치 등 한국의료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세계시장 진출 및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국가 위상에 걸맞는 사회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미래대비를 위해서는 베이비 붐 세대 은퇴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미래성장 잠재력 확보가 추진된다.

이러한 세가지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V. 충남 사회복지의 전략

1) 충남 복지여건의 변화와 전망

충남의 복지여건을 SWOT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충남 사회복지의 강점으로는 교통, 교육중심지로서의 입지적 유리성을 보유하고 있고, 지역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가 크다는 점이다. 충남은 이미 전국 최초로 보훈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하였고, 사회복지를 주요 도정방향으로 설정할 만큼 큰 의지를 갖고 있다.

반면, 충남의 약점으로는 지리적 광범위성으로 인해 복지서비스가 분산되어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지역복지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지역간 불균형적인 복지서비스도 문제가 되고 있다. 천안·아산 등 인구밀집지역에 편중된 지역복지공급체계는 복지수요자인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상대적으로 지역적으로 복지의 소외층이 야기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아직 사회복지 인프라와 전문서비스도 부족한 점이 있다. 개발과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사회복지공급체계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회복지전문인력도 점차 공급을 확대하고는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기존

사회복지전문인력의 업무과중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충남의 사회복지가 개선될 기회적 요인도 있다. 다가정 등 복지수요가 다양화되고 국민의 복지의식도 증대되고 있다. 지역의 복지에 대한 관심도 증대하고 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최근에 투자된 지역복지투자사업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책임성도 강조되어 보다 복지공급의 효율성도 제고될 것이다.

반면, 충남의 지역복지에 대한 위협요인도 있다. 수도권 기업의 지역이전으로 복지수요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의 고령화로 부양부담이 증대하고 있고 사회복지재정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지방재정확충의 한계로 증가하는 복지재정을 충당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은 향후 지역복지에 위협이 되고 있다.

2) 충남 사회복지의 전략

충남 사회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생활밀착형 복지지원망의 구축이 필요하다. 빈곤, 실업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민관협력을 통해 생활밀착형 복지지원망도 구축해야 한다.

둘째,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생활수준 및 기대수준이 향상되어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복지욕구충족을 위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미래세대의 삶의 질 향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인 복지지원과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족 및 여성친화적 복지기반의 조성, 빈곤 대물림의 방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위한 투자확대로 미래의 인적자원도 육성해야 한다.

넷째, 지역복지역량을 강화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지역특성에 기초한 복지추진방식이 강조됨에 따라 지역복지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갈등의 해소와 치유, 지역간 복지인프라의 불균형 해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 극복 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강화해야 한다. 다문

화·다인종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사회적 편견과 문화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다양성을 배려하는 문화도 확산해야 한다.

V. 분야별 충남 사회복지의 과제

1) 저소득층 생활안정분야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목적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조성이라는 방향 속에서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증가와 사회적 양극화를 고려하여 정책과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절대빈곤층과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안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사회안정망을 확대하고 비수급 빈곤층 생계구호를 강화하고, 저소득빈곤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활사업을 확대함과 동시에 노동부가 장려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경제통상실과 연계하여 일자리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활후견기관을 확대하여 차상위 계층의 자활사업을 확대하고, 자활사업 참여가정에게 가족단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적극적 자활의지를 함양하기 위해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저소득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해산비용 등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출산비용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함과 동시에 가족 구성원에 맞는 선택형 복지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해야 한다.

넷째, 긴급복지지원을 강화하고 위기가정 발굴시스템을 확립할 필요도 있다.

2) 노인복지 분야

향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일자리 및 소득지원을 통해 적

극적 복지를 실현하고, 노인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반을 확대하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목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이들 시설에서 활동할 유급봉사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를 제공하고, 실비시설입소자 이용료와 개인운영 신고시설에 대한 점진적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독거노인을 도울 수 있는 도우미파견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및 소득지원을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추진하고, 충남 실버사회적기업 추진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노인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반확대를 위해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경로당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3) 장애인복지 분야

2020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복지법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시혜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생활과 선택적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원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 수당 등 장애인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여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립생활과 선택적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활동보조 및 생활도우미 파견서비스를 확대하고, 직업재활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고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 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 재가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없는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장애인 특별수송체계를 구축하고, 농아인을 위한 공공기관 화상전화 완비, 장애인 보조견 훈련사업, 장애인 가족지원 활성화, 장애인 재활을 위한 연구지원센터 확대, 교육·문화생활 등 장애인단체 지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4)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아동·청소년복지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정보호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도인력 확충 등 방과 후 지도사업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기초생활권 단위로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을 추가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급식아동 실태를 조사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급식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 안정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교 주변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제 운영을 고려해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운영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학비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안전체험 환경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5) 여성·보육 분야

여성의 권익을 향상하고, 맞벌이 시대 건강한 아동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회참여를 확대하고, 가족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책을 강구하고, 공보육 기능강화로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성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여성지도자를 육성하고, 여성권익 보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여성평등 시대 양성평등교육도 확대하여야 한다. 다양한 가족의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 공보육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인건비와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를 지원하고, 취약보육 서비스와 평가인증 보육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6)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충남의 건강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며 효율적으로 운

영하고, 건강증진 및 예방 중심의 질병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과학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및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의료원 공공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충남내 지역간 공공보건사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립의료원의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며, 시·군의 응급의료서비스 기반을 개선해야 한다. 예방 중심의 질병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건강증진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 인프라 구축, 건강수명연장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지원, 출생률 제고 및 모자건강 지원, 출산 장려 및 지원,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가정을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외에 구강질환 예방사업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활성화하고, 만성질환 조기진단 및 치료관리도 병행해야 한다.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암검진사업의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및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보건사업 및 방문간호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7) 기타 분야

세계화로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복지문제도 새로운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안정된 생활보장 및 인권보호, 결혼이민자 지원, 노숙인 재활 및 사회복귀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주노동자 복지를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를 활성화하고, 이주노동자 및 새터민에 대한 건강보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해서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을 지원하며, 여성결혼 이민자에 대한 건강검진도 확대해야 한다. 노숙인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노숙인 상담보호센터와 노숙인 자활의 집을 운영하며, 노숙인 자활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Ⅵ. 맺는 말

민선4기를 맞아 충남은 그동안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 보훈복지, 여성복지 등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0년 이후에도 우리 지역에서는 향후 복지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어려운 복지수요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노령화로 인해 노인복지 대상자도 증가할 것이며, 장차 새터민을 포함한 외국인 이주자가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핵가족으로의 가족분화도 복지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러한 다양한 복지수요 증가를 맞아 충남은 분야별로는 단계별로 긴급한 복지사안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지역적 복지서비스 공급의 불균형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거창군(2006), 거창군 지역사회복지계획.
 경기도(2007),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
 류진석(2009), 충남 2020비전과 전략 위습 자료.
 보건복지부(2009), 2010년 업무보고자료.
 서울시(2006), 서울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충청남도(2006),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